

## 북한의 개혁 개방 가능성과 북 중관계 - 북한사회 변화의 성격을 중심으로 -

김 장 일(연변대 동북아연구원장)

### 차 례

- I. 들어가는 말
- II. 북한문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의 가능성과 도경
- III. 고난의 행군시대 이후 북한사회 변화의 성격
- IV. 북한의 개혁 개방 가능성과 중 조관계
- V. 맺는 말

### I. 들어가는 말

- 요즘 들어서서 북한문제에 대한 논의는 두 개의 상반된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음.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북제재와 6자회담의 논의가 한 개 측면을 이루고 있는 동시에 포괄적인 시각에서의 대북협력과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그 다른 하나의 측면을 이루고 있음.
- 상술한 논의들이 왜 상반된 성격을 지녔는가 하는 원인은 북한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딜레마에서 찾을 수 있음.
  -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과 북한의 핵문제를 비롯한 문제들의 해결이란 결국 북한의 변화에서 이끌어내야 한다는 상반된 인식이 그 딜레마의 근본적인 원인임.
  - 따라서 국제사회는 북한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이나 아니면 북핵문제

에 대한 점적 접근이나 하는 고민에 빠져들어 가고 있음.

- 북핵문제, 천안함사태 그리고 연평도포격사태 등을 계기로 한·미, 미·일 동맹은 한 층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강경한 대북 정책으로 북한의 굴복을 받아내려 하고 있음. 물론 강력한 제재도 북핵문제 해결의 한 개 도경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북한이 굴복하지 않고 위기를 고조시킨다면 그렇다고 할 대안이 없다는 고민을 안을 수밖에 없음.
- 다른 한편,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이 우선이라는 정책적인 기조로 북한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북한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꾀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 역으로 이러한 정책을 이용하여 핵문제의 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딜레마를 안고 있음.
- 미국, 한국, 일본과 중국의 상반된 북한문제에 대한 접근은 사실상 현재의 상황에서 그 어떠한 대북정책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신통치 않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형성된 것임.
- 중국의 많은 학자들은 핵문제의 해결이란 결국 북한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방식으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음. 그 주된 근거는 북한의 현 정권은 성격적으로 핵포기를 할 수 없다는데 두고 있음. 북한문제의 포괄적인 해결방식의 핵심적인 문제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루어내고 또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등장시키는 것임. 물론 이러한 접근방식도 만일 북한이 완고하게 개혁·개방을 거부한다면 신통한 대안이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북한의 변화와 개혁·개방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현실성을 띠고 있음.
- 문제는 북한이 개혁·개방을 거부하는데도 있지만 국제사회가 여태껏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그 개혁·개방의 국제적 환경을 조성해 주지 않은데도 있음. 하기에 북한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의 주요 의제를 북한정권의 개혁·개방 정책 선택의 가능성에만 설하지 말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

토하는 것에 설정해야 할 것임.

- 북한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도 그 해결의 한 개 도경이라고 인정될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한 계통적인 실시방안을 엄숙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방법론적으로 강력한 제재와 포괄적인 접근은 모두 그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북한문제 해결의 두 개의 도경임은 틀림없기에 극단적인 시각에서 그것들을 논의하는 것은 오류의 근원으로 될 수 있음.
- 본문은 북한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 할 것임. 북한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의 근거는 북한사회의 변화 가능성에 두어야 함. 만일 북한사회가 절대적인 폐쇄상태에 처해 있다면 우리들의 그 어떤 논의도 무의미할 것임. 필자는 고난의 행군시대를 거쳐 북한사회도 상당히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북한의 연착륙을 도모할 수 있는 포괄적 접근에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생각함. 북한사회의 변화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시장경제의 형성임.
- 중국의 개혁·개방초기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북한사회는 이미 지하이상(至下而上)의 사회적 변혁의 과정에 진입했다는 판단도 가능함. 시장경제의 형성 여부가 사회주의국가들의 개혁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시각에서 보면 북한의 시장경제가 그 제반 사회에 자리매김을 했다는 자체가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음.
- 화폐개혁이 실패한 후 북한정부는 연이어 시장 세력에 밀리는 모습을 보여 왔는데 그것은 시장경제가 이미 북한사회에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북한정부가 아무리 개혁·개방을 거부하더라도 북한사회는 점진적인 개혁·개방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음.
- 현재 북한의 시장경제는 극히 미약한 개방도, 열악한 정책 환경, 생산성 부족으로 인한 유통경제에 의존, 자본의 결핍으로 인한 제한된 규모 등 심각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지만 일정한 국제적인 환경만 조

성된다면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이것이 포괄적인 접근으로 북한문제를 해결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근거임.

- 향후 북한사회의 변화는 국제사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미 형성된 시장경제에 힘을 실어주는가에 관련될 것임. 북한사회의 연착륙 그리고 그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도경은 그 시장경제를 확장시켜주는 것임. 시장경제의 규모를 확장시켜 나아간다면 북한의 시장경제는 유통성적인 시장에서 생산성적인 시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게 증대됨. 따라서 북한사회도 시장의 논리로 점진적으로 변화할 것이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등장할 경제적인 기반을 형성하게 될 것임.

## II. 북한문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의 가능성과 도경

- 북한문제란 북한의 폐쇄적인 상태, 경제적인 낙후성, 경직된 정치구조, 대립적인 이념체계, 대량살상무기 등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가리키는 개념임. 많은 중국의 학자들은 북핵문제와 북한문제를 나누어 이해하고 있음. 북핵문제에만 집착한 대북정책을 점적인 접근방식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면 북한문제의 해결이란 북핵문제를 포함한 제반 북한사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포괄적인 접근방식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음.
-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대북정책은 북핵문제의 해결이라는 점적인 측면에서 그 기초를 이루고 있음. 미국 등 국가들은 대체로 북한문제 해결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에 관심이 없기에 당분간 강력한 대북정책으로 북핵문제의 해결을 시도할 것임. 반면 중국과 한국은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협력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기에 북한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중국의 경우 북한의 핵문제에 커다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당연하나 지역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이익이라는 구도로 인해 북한문제의 포괄적인 해결방식에 더욱 관심이 많음. 현재 한국정부는 강경한 대북정책을 펴내고 있으나 결국 포괄적으로 북한문제에 접근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 있음.

- 북핵문제에 대한 점적 접근방식과 북한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방식은 서로 상반된 대북정책이라는 양상을 보일 수 있음. 전자는 각종 수단으로 북한에 압력을 형성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핵 포기의 길을 선택하게 하려는 노력이기에 강력한 제재를 비롯한 대립적인 정책으로 그 기조를 형성하고 있음. 후자는 북한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려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일정한 범위에서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 즉 이러한 정책적인 기조는 상반된 구도를 지니고 있음. 물론 그 어느 것이 더욱 효과적인가 하는 문제는 판단의 시간이 필요하나 그것들은 모두 일정한 합리성과 한계를 지니고 있음.
- 만일 북한정부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보유를 고집한다면 북핵문제에 대한 점적접근은 사실상 그렇다고 할 성취를 거둘 수 없을 것임. 수십 년의 국제적인 봉쇄와 제재에서 북한사회가 버티고 나왔다는 사실로만으로도 점적접근의 한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북한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그 해결의 더욱 현실적인 도경이라고 인정될 수도 있음.
- 북한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의 핵심은 어떠한 시각과 방법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등장케 하는가 하는 것임.
- 여태껏 국제사회도 북한사회의 변화 혹은 북한정부의 개혁·개방 진로의 선택에 상당한 관심을 보여 왔으나 어떠한 방법으로 북한문제에 접근하고 또 그들의 개혁·개방을 유도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심각히 고려해 본적이 없음. 따라서 북한을 절대적으로 폐쇄한 사회로만 인식할 뿐 그 변화에 적극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음.
- 북한의 개혁·개방과 그 제반사회의 연착륙을 도모할 수 있는 도경

은 현실성이 있는 가능성으로 존재함. 그 가능성은 이미 고난의 행군시대이후 북한사회의 변화에서 나타나고 있음. 고난의 행군시대를 거치면서 북한사회는 계획경제체계의 붕괴와 시장경제체계의 구축이라는 심각한 사회적인 변화과정을 거쳐 왔음.

- 사회주의국가들의 개혁의 핵심적인 문제는 이왕의 계획경제의 탈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이에 비추어 보면 북한사회의 시장경제는 열악한 정책 환경, 상당히 결핍한 개방도와 자본의 결핍 등 심각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으나 소위 사회 제반의 개혁이라는 초보적인 단계에 진입했다고 판단됨.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볼 수 있었던 시장경제체계의 확립은 그 사회적 변혁의 핵심적인 과제였음. 이러한 시각에서 북한의 변화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음.
- 북한사회의 변화는 국제사회에 포괄적으로 북한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음. 이러한 접근의 핵심적 의제는 북한사회의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내는가 하는 것임.
- 만일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경제적인 협력을 도모한다면 북한사회는 점차적으로 시장의 논리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며 경제의 희생은 제반 사회의 변화를 촉진할 것임. 실지로 현재의 북한은 상당한 정도로 시장경제에 의존해 있으며 많은 일들은 시장논리로 이루어지고 있음.
- 절대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시장경제가 존재한다면 북한사회가 아무리 폐쇄적이라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그 개방도를 축적해 나가게 될 것임. 시장에서의 수요가 나타나게 된다면 이익을 추구하는 시장세력들은 각종 도경으로 그 수요를 충족시키려 노력하게 될 것임.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사회도 일정한 개방도를 확보하게 됨.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1분기의 중·조교역량이 9억달러를 돌파했다는 사실이 바로 이점을 증명하고 있음.

- 점적접근방식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정권의 근본적인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 원인이 중국의 대북정책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필자는 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정부가 적극적인 대중무역정책을 편 것도 그 하나의 원인으로 될 수 있지만 더욱 큰 원인은 북한사회에 이미 자리를 잡은 시장경제의 활성화에 있다고 생각함. 국제적인 제재가 심하면 심할수록 시장의 수요는 급증할 것이며 시장은 또한 각종 도경으로 이러한 수요를 만족시키려 노력할 것임. 현재 중·조변경지역에서 보따리 장사, 밀수 등이 급증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들이 바로 경제적인 제재에 대한 시장경제의 필연적인 반응이라고 인정됨.
- 북한사회 시장의 활성화가 포괄적인 접근방식의 핵심 의제라고 함은 시장의 활성화는 필연적으로 대외적인 교류의 확장과 대내적인 정책 환경의 개선을 요구하게 된다는데 그 이유가 있음. 대외적인 교류가 확장되면 북한사회의 대외개방도가 증대될 것이며 대내적인 정책 환경의 개선은 시장경제에 상당한 탄력을 주는 동시에 주민 의식을 포함한 사회 제반의 변화를 유발하게 될 것임.
- 즉 북한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려면 각종 도경으로 북한과의 협력과 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시스템 이론으로 보면 폐쇄된 계통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일한 도경은 그 계통에 물질을 주입하는 것임. 북한과 같은 폐쇄적인 사회계통도 마찬가지임.

### Ⅲ. 고난의 행군시대 이후 북한사회 변화의 성격

- 고난의 행군이후 북한사회의 변화는 시장경제의 확산으로 그 제반사회 변화의 지하이상(至下而上)의 과정을 거쳐 왔음. 북한정부도 피동적으로 이러한 변화에 순응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기에 향후의 변화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7.1조치란 북한사회 시장경제

체계의 형성에 순응한 개혁적 성격을 띤 조치라고 인식될 수 있음. 화폐개혁 과정에서 북한정부는 사실상 시장 세력을 타격하려는 정책을 펴냈으나 이미 상당한 사회적인 기반을 확보한 시장 세력을 인정해야 할 입장에 처해있음. 주민들의 시장경제의식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정도에 달했다는 사실은 북한사회의 변화도 변혁 혹은 개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것을 증명함.

- 고난의 행군시대이후 북한사회는 계획경제체계의 붕괴와 시장경제의 형성이라는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음.
  - 고난의 행군시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시장경제는 공공연한 사회적 인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음. 그 기반은 1980년대 중반부터 형성된 메뚜기 시장이라고 이르는 암시장의 세력 확장에 있음. 198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생산체계는 급속한 위축과정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해 배급체계가 마비되기 시작하였음. 배급체계의 마비는 농민시장의 확장과 도시의 메뚜기 시장의 형성을 부추겼음.
  - 1990년대 중반, 북한은 고난의 행군시대에 진입하였는데 전사회적인 혼란을 겪게 됨. 심각한 식량난은 인구의 대유동을 유발하였으며 굶주린 주민들은 일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장사 길에 나서게 되었는데 그것이 시장경제의 공개화와 기능의 확장을 초래하게 되었음. 물론 이 시기 북한정부는 여전히 시장경제를 거부하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시장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시도하였었음. 하지만 기아에 시달리는 백성들이 결사적으로 시장에 매달렸으므로 시장은 갈수록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 왔음.
  - 물론 북한정부도 이러한 시장을 비사회주의 현상이라고 규정하면서 통제책을 펴내느라 애를 썼지만 결국 전민이 장사 길에 나섰다 할 수 있는 시장경제의 발전을 막지는 못했음. 그 뒤를 이어 북한정부는 한 면으로는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시장거래를 묵인하였고 다른 한 면으로는 공업품, 술, 담배 등 물품의 거래는 통제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하였음. 즉 시장의 운영은 비록 제한적이었지만 정부의 묵인

으로 공개화 된 사회현상으로 등장하였다는 것임.

- 2002년, 북한정부는 7·1조치를 선언함. 경제관리개선조치라고 불리는 7·1조치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 물가와 환율을 조정하고, 분배제도를 개선하여 노동자들의 임금을 향상시키고 배급제도도 시장의 변화와 일정한 연관성을 갖도록 한 개혁의 성격을 지닌 조치라고 평가됨. 물론 중국의 개혁, 개방과는 비할 바가 아니지만 폐쇄적인 보루였던 북한으로 두고 말하면 엄청난 정책적인 변화라고 인정될 수 있음. 그 이유는 7·1조치는 성격적으로 시장의 변화를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묵인하는 정부의 정책이라는데 있음. 그 결과 북한의 시장경제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기 시작하였음.
  - 7·1조치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 차원에서 시장과 시장의 변화를 공식 인정하여 국가의 배급체계, 가격체계, 금융체계(특히 환율) 등을 시장의 변화와 일정한 평행을 유지하게끔 한 것임.
  - 7·1조치 이후 북한은 공식적으로 시장 확장에 주력하기 시작하였음. 북한정부는 암시장과 농민시장을 공식적으로 상설 종합시장으로 탈바꿈시켰음. 그 대표작으로 평양의 통일시장을 꼽을 수 있음. 7·1조치로 인해 형성된 시장의 확장과 시장경제의 합법성에 대한 인정 등이 7·1조치의 가장 뚜렷한 성과로 평가될 수 있음.
  
- 7·1조치 이후, 북한사회는 시장경제의 확장을 핵으로 변화되고 있음.
  - 첫째는 북한주민들의 시장경제의식의 급속한 확장임. 전통적인 사회주의 국가들은 모두 의식심층에서 시장경제를 자본주의적인 경제 요소로 인식하였으며 제도적으로 그것을 배격하려 노력하였음. 특히 북한과 같은 극단적인 전통사회주의 국가들은 시장경제를 악마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였기에 그에 대한 통제는 그 어느 사회주의 국가들보다 심했음. 하기에 시장경제의식의 형성은 곧바로 그 사회의 변혁을 의미함. 중국의 경우, 중국정부는 至上而下的 과정을 통해 주민들에게 시장의식을 주입하였는데 그 과정이 약 5~6년이 걸렸음. 중국

의 개혁·개방초기와 비교해보면 북한주민들의 현재의 의식상황은 적어도 1982년의 중국인들의 의식상태를 초월했다고 인정할 수 있음. 고난의 행군시대로 진입했던 그 때부터 북한주민들은 이미 장사만이 살 길이라는 점을 확고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전민장사라는 물결 속에서 시장경제에 상당히 익숙해 졌다는 점에서 북한에서는 이미 의식심층의 혁명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음. 7·1조치는 이러한 변화를 인정하였고 또 시장경제의식을 주민들 에게 확고히 심어줬다는 면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음.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주민들의 이러한 의식심층의 변화는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며 따라서 북한이 만일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한다면 중국보다도 더욱 빠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는 가설도 가능케 한다는 점임.

- 둘째는 시장경제의 신속한 확장임. 북한은 현재 시장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살아 갈 수 없는 상태에 처해있음. 배급체제의 붕괴는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더 이상 국가의 배급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시장에 나가 생존의 수단을 찾아야 하는 방법을 터득케 하였음. 현재 북한주민들의 생존방식은 두 개뿐임. 그 하나는 장사 길에 나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부패를 행하는 것임. 만일 부정부패란 특수한 사회집단의 특권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대다수의 주민들은 시장에서 그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음. 이것이 바로 소위 전민장사라는 국면이 형성된 근본적인 원인임. 평양시만 보더라도 200만 밖에 안 되는 인구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종합시장의 장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50만~6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음. 평양에 특수한 권력계층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야말로 전민장사인 것임. 다른 지역의 정황도 마찬가지임. 특권을 누리고 있는 계층의 시장 의뢰도도 상당히 높다고 함. 즉 현재의 북한에 있어서 시장이란 제반사회의 명맥을 이어주는 중요한 존재로 되었고 따라서 소위 사회주의의 배

급체계란 유명무실한 역사의 유물로 전락되었다는 것임. 이에 따라 시장은 날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제는 시장에 가면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번창해졌음. 시장경제의 확장은 북한은 이미 되돌아 갈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 셋째는 생산방식의 뚜렷한 변화임. 고난의 행군시대 이전, 북한의 생산방식은 전형적인 사회주의 계획적 집단경영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음. 하지만 고난의 행군시대를 시작하면서 주민들의 집단경영에 대한 관심이 크게 떨어졌고 또 살 길을 찾아 장사 길에 나선 그들은 자기 자신에만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기에 경제적인 행위는 많은 경우 개인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기업소와 공장들도 더이상 국가의 계획에 따라 생산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기에 그 생존을 위해 개인들과 손잡고 협력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음. 예를 들면 현재 북한에는 여객운송을 담당하는 “서비차”가 보급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이동은 대체로 서비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이러한 서비차란 실질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제공하는 것임. 물론 개인들이 독자적으로 이러한 업체를 운영하자면 많은 제약이 뒤따르기에 기업소 혹은 군부와 협의하여 그들의 명의를 차량을 빌려서 운영하는데 이윤은 나누어 가지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중국의 도급제와 비슷한 성격을 띠었다고 볼 수 있음. 현재 북한 전역에는 개인적으로 필수품생산을 진행하는 업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함. 7·1조치 이후 이러한 생산방식의 변화는 더욱 뚜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고난의 행군시대 이후 북한사회의 변화를 성격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음.
  - 시장의 확장과 시장의식의 고착은 곧바로 제반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변화는 곧바로 개혁이라고 인정해야 할 것임. 그 이유는 전통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이란 시장경제 체계의 구축이라는 핵을 에워싸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있음. 중국의

경우 그 개혁·개방은 시종일관하게 시장경제체제의 형성과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음. 전통사회주의와 개혁·개방이후의 사회주의의 차이점이란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차이점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인정됨.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북한이라는 특정된 사회 환경에서 시장경제가 자리를 잡았다는 자체가 상당한 개혁이 아닐 수 없음.

- 물론 북한의 시장경제는 상당한 한계를 지니고 있음. 중국과 비교해 보면, 중국의 개혁·개방은 중앙정부의 결책과 적극적인 유도로 이루어진 반면 북한의 변화는 시장의 변화에 정부가 순응하는 피동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임. 즉 중국의 개혁·개방을 至上而下의 개혁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면 북한의 변화는 至下而上의 개혁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임. 7·1조치란 결국 북한정부가 시장의 변화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드린 피동적인 개혁이라고 볼 수 있음. 이러한 변화에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라고 지적될 수 있음. 또 북한의 시장 경제는 상품의 부족과 개방도의 부족이라는 문제점들을 안고 있음. 이러한 시장은 생산성적인 시장인 것이 아니라 소비품 유통의 시장 이라고도 볼 수 있음. 즉 시장은 생산업체들의 상품유통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상품을 위주로 한 소비품 유통시장이라는 것임. 그리고 북한정부가 피동적으로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고 있다는 자체가 그 한계를 임. 그 하나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없고 오히려 정부는 부득한 경우 사회의 변화에 순응하나 그것을 자본주의의 경향으로 간주하고 저애하려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임. 다른 하나는 정부차원의 개혁과 개방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는 북한의 시장경제는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규모경제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없다는 점임. 북한주민들의 경제활동은 상당 부분 생존의 기본적인 여건의 마련이라는 목표로 진행되고 있고 또 금융기관의 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기에 규모경제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음.
- 하지만 북한의 이러한 변화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는 사실, 그리고 시장경제는 이미 인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2009년 말 북한은 화폐개혁을 단행하였으며 또 시장을 폐쇄하려는 시도까지 하였었음. 하지만 화폐개혁의 실패로 북한정부는 연이어 주민들에게 양보하는 자세를 보여 왔으며 시장도 원상복구를 했음. 이러한 사실은 북한의 시장경제를 핵으로 한 변화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음.

- 북한의 이러한 변화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북한사회 변화의 전로는 시장경제체계의 구축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임. 비록 북한의 시장경제는 극히 제한적이나 외부의 지속적인 경제적인 협력이 있다면 부단히 확장하여 제반사회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음. 한 면으로 북한 시장경제의 확장은 북한사회의 至下而上의 변화과정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한 면으로는 그 것은 또한 제반사회의 개방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게 될 것임.

#### N 북한의 개혁 개방 가능성과 중·조관계

- 고난의 행군시대를 거치면서 북한사회가 至下而上의 변화를 겪어왔다는 것은 북한정부는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피동적인 지위에 처해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도 함. 즉 북한정부는 중국정부처럼 정부주도로 강력하게 개혁·개방을 추진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임.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보면 북한정부는 중국과의 경제교류의 확대, 신의주와 나선지역 특구건설 등 일정한 범위에서의 개방을 추진할 가능성이 큰 반면 제반사회의 개혁·개방을 추진할 가능성은 없음.
- 북한정부가 전면적인 개혁 개방을 거부하고 있는 심층의 원인은 정권 유지의 부담감, 적대적인 한국의 존재 그리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역사를 부정할 수 없다는데 있음.
  - 1980년대 중반, 북한정부는 중국의 개혁·개방에 상당한 관심을 보

었다고 함. 하지만 1989년부터 연이어 발생한 중국의 천안문사태,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구소련의 해체 등 중대한 국제적인 사건들이 북한정부에게 개혁·개방이란 곧바로 죽음의 길이라는 인식을 심어놓았음. 북한정부가 완강하게 개혁·개방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음.

- 북한정부는 한국과의 힘겨루기에서 경제적인 격차가 너무 큰 것을 부담거리로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주도의 흡수통일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음. 한국이라는 적의 존재는 북한이 개혁·개방을 시도할 수 없는 중요한 배경임.
- 개혁·개방이란 실질적으로 기존의 정책에 대한 부정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변화인데 북한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음. 기존의 정책에 대한 부정은 유일사상체계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수령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중국과 같은 사상해방운동을 거부할 수밖에 없을 것임.
- 하지만 시장경제가 자리를 잡았고 또 주민들의 시장경제의식이 날로 확장되어가는 현실을 두고 북한정부도 마냥 개혁·개방을 거부하는 입장에만 매달려 있을 수 없을 것임. 7.1조치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정부도 至下而上의 사회적 변화의 압력을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 특히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 대외적인 돌파구를 찾아야 하기에 철통같이 폐쇄적인 상황을 유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 화폐개혁 이후, 북한정부는 시장 세력에게 연이어 밀리는 모습을 보여 왔는데 그것은 북한정부도 어쩔 수 없이 시장경제의 확장에 순응해야 할 입장에 처해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음. 북한사회의 심각한 변화가 至下而上의 도경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는 대목임. 확장되어 가는 시장경제체제와 시장의식으로 인해 북한사회의 여론과 행위방식들이 변화해 가고 있으며 새로운 행위규범들이 등장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를 두고 북한정부는 순응이나

아니면 기존의 정책을 고수하느냐 하는 고민에 빠져 들어 가고 있음. 만일 이러한 변화에 대해 북한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펴낸다면 혹시 그 변화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으나 거꾸로 이러한 변화를 막으려 한다면 북한정부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것임. 즉 현재의 북한정부는 진퇴양난의 정책선택의 갈림길에 들어섰다는 것임.

- 북한정부가 정책선택의 갈림길에 들어섰다고 함은 북한사회도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함. 만일 국제사회가 북한사회의 적극적인 변화를 유도할 외부적인 환경을 조성해 준다면 북한정부도 피동적인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음.
- 북한의 적극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현재 전개되고 있는 중·조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개혁·개방과정에서 성공적인 경험을 상당히 축적하였고 전통 사회주의국가들의 개혁·개방의 문제점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 이러한 경험은 북한의 변화에 좋은 참고계(參考系)를 형성해 줄 것임.
  - 중국은 두만강유역개발을 핵으로 한 동북아지역협력을 희망하고 있음. 창지투개발개방계획의 실시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두만강유역개발이란 별로 큰 현실성이 없는 일방적인 희망에 불과함. 많은 중국의 학자들이 지적하다시피 두만강유역 개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북한의 폐쇄적인 상태에 있음. 즉 두만강 유역 개발의 성공여부는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는 만큼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이러한 이익구도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적극적인 변화를 유도해 내려하고 있음.
  - 현재 중국은 유엔 결의안을 존중하는 전제에서 북한과의 경제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의 목표는 북한의 급변사태를 방지하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데 설정되어 있음. 중국정부는 북한의 신의주와 나선지역의 특구건설에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특구건설에서 북한이 경험을 쌓고 또 상당한 이익을 챙긴다면 향후 북한

의 적극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임.

- 폐쇄적인 계통의 변화는 물질주입에서 형성됨.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중국의 대북경제협력은 북한사회에 자리매김한 시장경제에 탄력을 넣어주는 역할을 감당할 것임. 시장경제의 확장이 중국적으로 북한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사회적인 세력을 형성해 준다는 시각으로 중·조경제협력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경우, 많은 사람들은 중·조경제협력과 새롭게 전개되는 중·조관계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음. 중국이 북한을 경제적인 종속국으로 만들려 한다거나 중국과 조선이 동맹강화로 한·미동맹의 강화에 대응하려 한다는 등의 인식들이 바로 그것들임. 이러한 인식들은 현시대 국제행위방식의 변화를 제대로 판독하지 않은 데서 나타난 오류들임. 중국이 북한의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은 당연하나 한 개 주권국가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 그리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보면 중·조동맹관계의 회복과 강화는 오히려 한·미, 미·일 군사동맹의 강화를 야기할 수 있기에 중국에게 더욱 심각한 안보문제를 안겨줄 수 있음. 북한과 한국지간의 그 어떤 긴장상태도 모두 중국의 안보와 경제적인 발전에 문제점을 형성해 줄 수 있기에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의 기초는 긴장상태의 억제에 두고 있음.
- 북한사회의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변국이 중국이라는 점 그리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해 내야만 한반도의 연착륙, 비핵화,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조관계를 재인식할 필요가 있음.

## V. 맺는 말

- 북한문제를 에워싸고 그 어느 주변국이던 모두 정책선택의 딜레마를

안고 있음. 이러한 딜레마로 인해 각국의 대북정책은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 북한을 여지없이 궁지에 몰아넣어 굴복을 받아내는 것 아니면 북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그것을 유도하려는 것이라는 상반된 정책이 바로 이러한 딜레마의 산물임. 문제는 이러한 딜레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슬기롭게 상반된 정책의 한계와 합리성을 인식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을 선택하는데 있음.

- 미국과 한국 등 나라들의 북핵문제의 입장은 이해가 감. 하지만 북핵문제에만 집착한다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게 됨. 하기에 보다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심각히 토론해 볼 필요가 있음.
-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강력한 대북정책을 펴야할 이유는 충분할 것임. 그렇다고 마냥 대립적으로 한반도문제를 끌어 갈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님. 하기에 중국과의 전략적인 대화를 강화하고 두만강유역 개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으로 현재의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전략적임.
- 중국의 단둥과 훈춘지역의 개발, 개방 과정에 한국이 동참하고 협력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인 차원의 행위가 아님. 중국적으로 북한을 유도하여 개혁, 개방을 이룩하고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도모하는 결과를 나타낼 것임.